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이다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12면

앞시즘2019 해외 연사 강연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6~8면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5면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2면

부마항쟁 - 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대규모 저항으로
유신체제 무너지다

4면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2면

서평 |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2017년은 《자본론》 1권이 발행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기념하며 마르크스가 쓴 정치경제학 저작들의 중요성과 그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자 했고 이는 지당한 시도다. 하비가 쓴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마르크스 자신이 쓴 표현)는 이 사회의 모순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기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부는 돈 버는 데로만 향하고 지구 환경은 파괴되고 있는 모순 말이다.

또한 하비는 자본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옳게 주장한다. 반면에 현대 경제학은 2007~2008년 금융 위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노동 착취가 이윤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하비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한다.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방의 정치에 있어 관건은 거대한 생산력을 사회·정치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 그리고 제왕적 사고방식에 젖어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 돼 가는 유난히 유해한 형태의 국가 기구의 지배에서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런데 마르크스 저작 해설서라면 이런 “해방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잘 복무하는가 중요할 것이다. 이 책은 이 점에서 약점이 있고 명확성이 부족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의 분석은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 또 그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고 좌파가 다른 종류의 동맹들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소 평가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하비가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듯 생산 지점에서의 투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동맹 문제를 무시한 적이 없다. 1945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대중 운동만 보더라도 제국주의 전쟁, 인종 차별, 파시즘, 낙태권, 수도세, 주택, 세일가스 시추 등을 놓고 생산지점 대신 거리 등에서 투쟁을 벌였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일부였다. 하지만 이런 투쟁들에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더해졌더라면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2010년 튀니지와 2011년 이집트 혁명이 초기 국면에서 성공을 거둔 데는 조직 노동자들의 구실이 분명하게 작용했다.

하비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산 지점에서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이 “총알을 한 발만 갖고 싸우려는 것”이며 이는 마르크스의 생각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사회의 “일곱가지 계기(기술, 자연에 대한 관계, 사회적 관계, 물질적 생산양식, 일상생활, 정신적 관념, 제도적 틀)”를 설명하는데, 이 모두가 바뀌어야 성공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1917년 러시아혁명에 대해서도 하비는 “혁명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운동이나 동궁 급습같은 교란 사건이 아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혁명은 거대한 운동들의 분출로 이루어진다.(러시아혁명의 경우 빵, 토지, 평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생산력이 해방되려면 생산 과정의 핵심에 위치한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에게서 생산력 통제권을 빼앗아 해방을 위한 투쟁의 최종 승리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문재인 정부, 역시 친제국주의적임을 드러내다

이현주

국무총리 이낙연이 10월 22일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이낙연은 24일 일본 총리 아베와 회담을 하고 문재인인의 친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낙연의 방일이 한일 갈등을 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은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자신이 항일 투사인 양 행세해 왔지만,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문재인 정부도 제국주의에 타협하는 그저 그런 정부임을 보여 준다.

19~20세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는 바로 일왕의 직접적 통치 하에서 벌어졌다. 일왕이 침략과 전쟁의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패전 후에 살아남은 것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의 구질서와 천황제를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천황제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지만, ‘상징’ 천황제의 존재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과거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은폐이자 책임 회피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왕 나루히토가 ‘평화’, ‘헌법 수호’를 언급한 것을 두고 그를 ‘평화주의자’로 보거나 그에게서 아베 ‘견제’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나루히토는 즉위식에서 그런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일왕이 일본 우익의 정치적 상징 구실을 해 왔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일왕 앞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만세 삼창을 하는 아베를 보라.



올해 9월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함

문재인 정부는 항일 제스처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감이 있는 대중에게 환심을 사려 했지만, 이제 물러서려는 듯하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설 의지와 능력, 무엇보다 이해관계가 없었다. 한국 지배계급은 50년 넘게 일본과 경제·안보 면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 주요 진보·좌파가 일본에 맞서는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를 같은 편으로 보고 응원해 왔지만, 애초부터 무망한 일이었던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타협안(1+1안)을 줄곧 제시했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협상에 응한다면 더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는데,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1+1+α’ 안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과 부담을 더욱 덜어 주는 방안이다. 물론 이런 타협안조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

제가 진즉에 해결됐다고 보는 아베 정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때부터 얼마든지 그 협정을 복원할 수 있음을 감추지 않아 왔다.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고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이낙연) 즉 애초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대에서 비롯한 게 아니었다.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을 편드는 상황에서 11월 말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쪽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지하고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 제국주의와도 협력해 온 장본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시절의 문제만이 아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일왕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미일] 협력관계는 인도-태

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일본에 맞서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뒤에도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계속됐다. 지난 9월 강감찬함은 일본 군함과 함께 아덴만에서 합동훈련을 벌였고, 11월에도 한국은 미국·일본·호주 등과 함께 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10월 1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참모본부의장 회의에도 참여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에 항의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낸 학생들은 구속됐다.

이낙연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제국주의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진보·좌파가 협력하거나 견인할 만한 정치 세력리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 준다. 허상을 좇아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고 비판을 삼갈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노동개약을 밀어붙이기로 합의한 이때,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고 개약을 막기 위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정부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칠레, 생계비 인상 항의

군대에도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커녕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건축과 정치 위기로 인한 대규모 항쟁이 거듭 벌어지고 있다. 10월에만도 에콰도르, 칠레, 레바논, 카탈루냐 등에서 노동자 서민 공격에 맞서 대규모 항쟁이 분출했다. 총파업 등을 동반한 대중 투쟁으로 정부가 건축을 철회해야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박한 노동개약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할 남한 노동자 서민들이 이들의 단호하고 독립적인 항쟁에서 영감과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에콰도르·레바논·카탈루냐 등 다른 국제 소식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칠레의 우파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해 생계비 부담 증대를 촉발하자, 대규모 시위 물결이 칠레를 휩쓸었다. 10월 17일 학생 수천 명이 칠레 곳곳에서 지하철 무임 승차 시위를 벌인 것이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무리지어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었고, 지하철역 수십 곳에 불을 질렀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 일곱 곳에서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쌓아 도로를 봉쇄했다. 시

위대는 버스, 주유소, 슈퍼마켓,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 에넬의 칠레 지사 건물에 불을 질렀다.

시위의 규모와 전투성에 밀린 피네라는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비상사태

그 후 피네라는 정부 각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칠레 사회에 존재하는 과도한 불평등을 줄일”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작 몇 시간 후에 피네라는 시위대가 “범죄 조직의 전형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탄압을 시작했다.

피네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군인 약 1만 500명과 탱크를 [수도 산티아고와 주요 도시] 거리에 배치했다.

1970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이래 처음으로 칠레의 거리가 군화발에 짓밟혔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물대포를 쏘았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약 1500명이 체포됐고, 최소 여덟 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 사망했다. 이런 강경 진압과 거짓 양보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거리를 지켰다. 임금 수준은 형편 없는데 생계비는 하늘을 찌를 듯 높기 때문이었다.

칠레의 평균 임금은 월 90만 원가량이다. 이는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

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연금생활자는 연금으로 월 7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한편 억만장자인 피네라는 칠레의 교육·의료를 상당 부분 민영화하고는 칠레가 남미의 “오아시스”라고 자랑한다.

시위 참가자 엔리케 아라야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만 같아요. 지하철 요금 인상은 그저 방어쇠였던 겁니다.”

또 다른 시위참가자가브리엘라무뇨스는 이렇게 말했다. “훔칠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끝도 없는 괴로움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부가 우리 말을 도통 듣질 않으니 항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개비 쇼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7호 / 번역 김준호

친기업 문재인 — ‘이러려고 그를 지지했나?’

김문성

조국 정국에서 우파 야당에 밀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자 안간힘을 쓴다. 대외 정책에서도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노동 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침 발린 말들이 사라진 지는 사실 오래다. 하지만 최근 행태는 뻔뻔하리만치 노골적이다. 오만과 오판으로 헛되이 보낸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한 기세다.

조국 등을 앞세워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긴 문재인 정부는 일왕 즉위식에 총리 이낙연을 보내어 일본 총리 아베와 면담하도록 했다.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 등에 부정적 반응이 나오던 터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 대사관저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 등에 비폭력적인 상징적 항의를 한 대학생들을 4명이나 구속했다.

10월 20일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계약 입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주52시간제를 못 지키는 기업들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적용이 시작되는 50~299인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뒤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발전 하청노동자고(故) 김용균의 죽음, 톨게이트 노동자 대량 해고, 세월호 수사 등에서 보인 태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국회에서 노동개약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라는 촉구였다.

사생결단으로 “조국 대전”을 치렀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노동개약 처리 시한을 합의하는 데에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경제·안보 위기에 뚜렷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말과 폭로로 소모적 경쟁을 벌인다. 이때문에 공식 정치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한다

이인영과 나경원과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노동개약 법안 처리키로 합의한 10월 21일에는 군인권센터가 옛 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2017년 촛불 진압 비상계엄 선포 계획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회 혼란을 이유로 군대가 출동해 정부기관, 법원, 언론 등을 일거에 장악할 계획이 담겨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항 움직임을 제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도 여권은 남북 화해 국면이 대중을 달래는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동개약을 추진하려다가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자 기무사 문건 폭로를 활용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폭로가 아니다. 현 집권 세력이 군부를 들쭉서 놓고는 판이 너무 커지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쪼뼛뼛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기무사 영관급 장교들에 의해 공개적인 하극상이 일어났다. 그리고당시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오히려 덮어 주려 했다가) 얼마 뒤 옷을 벗었다. 이번에도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국회에 나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이명박 구속 등 개가를 올리던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도 이 건을 수사하는 데서는 맥을 못 찼다. 문건 작성 책임자인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행방이 오리무중(미국 도피)이라며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문재인은 기무사를 “해편”(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낱말인데, 청와대는 해체에 가까운 재편이라고 설명했다)해 안보지원사로 간판만 바꿔 다는 것으로 당시 상황을 수습했다.

새로운 폭로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기무사 조직이 재편돼 당시 일이나 문건을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23일 오늘밤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만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문재인 정부는 더 곤란해지고, 우파 야당들은 목소리를 더 키울 것이다. 나경원은 지금도 패스트트랙 지정 방해 행위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후보 선정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도 갈등이 무마되고 우파의 위협이 약화되는 건 전혀 아니다. 조국 문제로 특권의 실체와 위선을 목격하고 실망한 많은 사람들(주로 서민층 청년)은 구속영장 기각을 권력 남용의 결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다수는 우파가 아니고 무당파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양극화된 공식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이런 불만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약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기업 친화성을 드러낼수록 우파의 사기는 올라간다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문재인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친기업 본색을 새삼 재확인한 대통령 국회연설

문재인은 10월 2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된 기조임을 보여 줬다.

문재인은 이 연설의 결론에서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과 친기업 규제 완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살리기”는 친기업, 이윤 살리기의 다른 말이다.

문재인은 현재 한국을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다”고 규정했다. 지배계급 언론들이 즐겨 쓰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합론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문재인은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이 “대의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이자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과 국방비 예산의 증

가 규모는 모두 액수로 표현했다. 연설에서 언급된 숫자들을 더해 보면,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이 항목들임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소소한 복지 몇 개도 언급했지만 액수는 말하지 않았다.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이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언급한 예산 증가분의 실체는 “강한 안보”를 위한 군비 증가다. “잠수함, 정찰 위성”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열망도 반영했다.

한국 국가는 이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 이런 열망의 결과에는 경제적 우호 증진뿐 아니라 무기 수출, 해외 파병, 해외 진출 기업의 지위 보장과 노사관계 보호,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견 단속도 포함될 것이다.

“공정” 개혁은 모두 경쟁의 공정

관한 것들이었다. 서민들은 교육 개혁으로 입시 경쟁의 억제를 바랐는데, 정시니 수시니 하는 경쟁의 물만 얘기했다. “갑을 문제 해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관한 것이지, 노동 존중은 언급도 없었다.

조국 일가(또는 그 덕분에 부각된 나경원 일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하는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또한 결과의 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쟁은 격화되고 과정의 공정성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다.

끝으로, 공수처 통과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중요하다고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두 달간 여권이 정치적 자원을 총동원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방해해 온 것을 생각하면, 공수처의 미래도 뻔해 보인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서 드러난 자본주의 국가의 실체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이 문건에는 계엄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엄 이후 보도 통제 상황까지 “보수 언론”과 “경제단체” 등이 군부 쿠데타 세력의 협조자로 설정돼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령 준비 단계에서는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식이다. 계엄 후 언론 통제 시에도 “보수 언론 대상 정부 입장 홍보 및 시위대 폭력성 부각 보도”가 한 항목으로 돼 있다. 보도 통제의 한 수단이 “보수”(즉, 우파) 언론인 것이다.

이 문서는 “계엄 선포시 고려 사항”

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한 “경비계엄” 대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이] 가능”한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다고 판단·제안했다. 그러나 계엄 직후 계엄사령관이 할 일로 “국내 외국인·기업 대상 재산권 및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들었다. 계엄 하에서도 사용자들의 기본권(재산권)은 제한은커녕 보호되는 것이다.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데도 검찰조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군부가 국가권력의 진정한 실체 중 하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군 수사·정보 기관인 기무사의 기능을 국가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검찰도 공유함을 보여 준다.

기무사 계엄 논의는 공수처 수사 대

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려고 한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도 기무사를 파헤치지 못했다. 기무사 수사는 계속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 운동 때 진행된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수사는 국정원장을 두 명이나 구속시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결국 이런 과정 전반을 보건대, 법원, 검찰, 경찰, 군대 같은 기관들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는 개혁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대중 투쟁으로 아래로부터 압박할 때만 일시라도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력을 추스릴 것이므로, 결국에는 해체시켜 산산조각 내야 한다.

부마항쟁 — 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김동철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공저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재가 끝나길 바랐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김재규가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다고 보는 것은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 망치를 쥔 사람과 주변의 환경까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모순

박정희의 죽음은 박정희가 만든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했다. 즉,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급속한 산업화(자본축적)는 몇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했다.

첫째, 미국의 구실이다.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는 해방 직후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분쇄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을 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냉전)이 본격화하는 맥락 속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여기에 개입한 미국은 한반도 남쪽을 소련의 남하를 막는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중반 미국은 남한에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고 일본의 기술과 자금이 제공되도록 하면서 남한의 초기 산업화의 길을 열어 준다.

둘째, 국가의 구실이다. 국가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중심적 구실을 했다. 국가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디로 수출해야 할지를 지도했다. 이런 국가 주도 자본축적(국가 자본주의)은 당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적 양상이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의 구실이 결합되면서 소련이나 북한, 남미와는 다르게 수출 지향적인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자본축적을 하게 된다.

셋째 요소는 둘째 요소와 결합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억압이었다.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가혹한 착취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국가는 값싸고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자본축적의 강력한 추진자 노릇을 하게 된다.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그 결과 한국 자본주의는 성장과 함께 몇 가지 모순이 자라났다.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방식의 자본축적은 세계경제의 등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한국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위기에 노출되게 했다. 1970년 전후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1979년과 1980년이 그랬다.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위기가 왔을 때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강력한 국가



1979년 부산의 시위대 행렬 김재규는 부마항쟁을 보고 체제를 구하려면 박정희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개입과 억압적 착취 체제의 강화였다. 이런 맥락에서 1972년 유신이 선포됐다. 물론 이것이 위기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말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는 대중 저항과 맞물리면서 박정희 체제의 최상층 관리자들 가운데 하나를 사형집행인으로 만들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낳은 또 다른 모순은 대규모 노동계급의 창출이다. 마르크스 시대 전 세계 노동계급 수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시기 한국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던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군사 독재 정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과 결합돼 표출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때로는 폭발적인 성격을 띠었다.

저항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대한 초기 저항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으로 표출됐다. 전태일의 희생으로 소수의 노동자들은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 청계피복, 동일방직, 방림방직, YH무역 등에서 국가와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국가는 이런 움직임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경제 투쟁이 이내 정치·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다.

1978년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중앙정보부까지 개입해 탄압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1979년 YH무역 투쟁도 한 사업장에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 초점이 됐다.

정부는 야당인 신민당사로 들어간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다. 이 과정에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YH무역 여성 노동자들

서 노동자 김경숙씨가 사망했다.

YH 투쟁은 부마항쟁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부마항쟁의 시발점이었던 부산대의 선언문에는 YH 탄압에 대한 항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부마항쟁은 학생들의 투쟁으로 시작했지만 노동자와 도시 하층민이 대거 참가하면서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이 격렬하게 표출됐다. 관공서와 파출소가 공격받았고 박정희 초상화가 불탔다.

많은 기자들이 당시 분위기를 '축제'로 묘사했다. 숨막히는 억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해방감을 만끽했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세상이 변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부마항쟁은 누적된 계급적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려 했다. 1979년 전기료가 30퍼센트 오르고 물가도 22퍼센트나 올랐다. 체불임금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부산과 마산의 부도율과 체불임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항쟁 기간 고위층이나 부자집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부마항쟁은 군대를 동원한 박정희의 탄압으로 '강요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부마항쟁의 영향으로 지배자들의 분열이 가속됐다.

김재규는 부마항쟁이 소수의 폭동이 아니라 누적된 계급적 불만이 폭발한 민란이나 대중 봉기의 성격이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체제 자체가 위협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박정희는 부마항쟁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자신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압적 통치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임으로써 위기에 처한 체제를 구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박정희 사후 상황을 결정지은 것은 김재규의 손끝이 아니었다. 김재규로 하여금 박정희를 죽이게 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박정희의 뒤를 이어 억압적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전두환이 대립했다. 전두환은 지배자들의 분열과 혼란을 뚫고 분출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유혈 낭자하게 짓밟고 나서야 겨우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박정희 시대의 진정한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노동계급은 1980년 패배를 겪기는 했지만 1960년대 이래 양적·질적으로 계속 성장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박정희가 만들고 전두환이 이어받은 억압적 착취 체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교훈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부마항쟁은 광주항쟁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의 일부이며 자신들이 그 전통을 승계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독재를 계승하는 우파의 부활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설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재에 맞선 항쟁들의 정신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우선 민주당은 일련의 민중항쟁에서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며 대중이 요구한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야말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무릎 꿇리고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6월 항쟁의 성과를 공고히 했고 1989~1991년 군부회귀 시도를 좌절시키고 1996년 12월~1997년 1월 대중파업을 통해 일당국가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확대해 온 주역이다.

그 덕분에 1997년 12월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확대한 민주주의의 수혜를 민주당이 입은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중항쟁은 계급 적대의 표현이기도 했다. 과거에 탄압받았지만 이제는 몇 차례 집권까지 경험한 민주당은 기성 권력 집단의 일부가 됐다. 지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계급 불평등에서 보듯이 민주당도 부의 축적과 대물림에서 다른 지배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현 집권 세력이 말하는 진영 논리에 계급을 옥여넣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우파뿐 아니라 현 집권 세력에게도 맞설 것인가.

민주당은 박정희에 대해 독재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성장의 업적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평가한다. 우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고 반박한다. 즉,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파의 주장은 박정희 독재를 옹호하는 역겨운 주장이긴 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박정희 명령의 부활을 막으려면 단지 박정희의 정치적 독재에 대한 비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억압적 착취 체제(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 결합돼야 한다.

홍콩 민주주의 투쟁, 송환법 폐기에 성공!

박근혜 퇴진 운동의 홍콩판이 될 수 있을 것

김영익

홍콩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투쟁 끝에, 마침내 송환법안이 입법회에서 공식 폐기됐다. 10월 23일 홍콩 자치정부는 입법회(의회)에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입법회는 심의 없이 법안 공식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 대중의 투쟁에 밀려 양보한 것이다.

송환법 완전 폐기 과정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오랜 경구를 다시금 증명했다. 9월 초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이 송환법 철회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입법회가 열린 10월 중순까지 정부는 운동을 강도 높게 탄압했다.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일부 친중파 정치인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차단·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실탄에 맞는 학생들도 속출했다.

그러나 대중의 저항은 계속됐다. 정부의 위협과 탄압에도 홍콩 대중의 분노와 투지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분노에 15세 소녀 의문사가 기름을 부었다. 적극적인 시위 참가자였던 천연린은 실종됐다가 바닷가에서 옷이 모두

벗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수영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난 15세 학생이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데 의문을 품는다. 그가 살해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특히 홍콩 경찰을 의심했다.

10월 16일 오랜만에 열린 입법회에서 캐리 램이 시정연설을 하려 했다. 그러나 캐리 램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예정된 시정연설을 마치지 못했다.

경찰 탄압과 더불어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있었다. 10월 16일 민간인권전선 의장 지미 샴이 쇠망치 등으로 무장한 괴한 4~5명에게 피습돼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사회민주련선 당원이자 성소수자 활동가다. 괴한들은 쇠망치로 그를 공격하고 도주했다.

그러자 10월 20일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피습 사건을 규탄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들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왔다. 집회 조직자들은 이날 시위에 35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상황 통제가 여의치 않자, 중국 정부와 홍콩 자치정부는 송환법안을 폐기해 일단 시간을 벌고자 하는 듯하다. 물론 틈을 봐서 운동 내 급진파를 고립



바리케이드를 쌓으며 저항하는 홍콩 시위대

시키고 이들을 계속 탄압하려고 할 것이다.

투쟁의 발단이 된 송환법안은 마침내 폐기됐지만, 지금의 홍콩 운동은 단지 송환법만이 아니라 오늘날 중국과 홍콩이 겪는 더 심각한 문제들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리고 법안 폐기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처음에 주도해 승리한 경험 덕분에, 이후에 노동운동이 의식과 조직

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일이 홍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리 된다는 보장은 없다. 혁명가들의 구실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제 홍콩 대중 다수는 송환법 폐기 이상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미 6월부터 보통선거 실시 등 여러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들이 제출돼 있다. 홍콩 대중의 사회·경제적 불만 또한 매우 크다. 송환법안 폐기 이후에도 홍콩 운동

은 당분간 지속될 듯하지만, 운동의 지향을 놓고 장차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홍콩 운동이 더 심화·확대하려면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이 일터와 거리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고무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결합되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이 운동의 더한층 급진화와 심화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의 서구식 탄압?

10월 17일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 사회에는 홍콩의 소요가 본토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홍콩 사태의 폭력적 발전은 서구식 민주제도 아래에서러야 쉽게 출현할 수 있는 산물이다.” 홍콩의 투쟁이 ‘사회주의’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식 정치 제도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회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홍콩 운동이 본토로 확산되지 않을 만큼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면, 중국 정부는 왜 운동 초기부터 홍콩 소식이 본토 내 인터넷에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했을까?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라면, 서구식 민주주의 사회보다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가 비할 바 없이 발전해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은 노동자 국가를 세워 그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만,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마르크스)가 돼야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홍콩 운동 분출의 근저에 깔린 홍콩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들(빈부격차,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부패,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여 또는 부재 등)은 모두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다.



홍콩 현지 사회주의자들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중국 사회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홍콩에서의 노동자 권리 신장, 정치·시민적 권리 향상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었다. ‘사회주의’ 중국에 주권이 넘어간 지 20년이 지난 홍콩에서 2011년에야 최저임금제가 겨우 도입됐을 정도니 말이다.

중국 지배자들이야말로 홍콩의 자유시장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적극 이용해 이익을 누렸다. 중국에 투자되는 해외직접투자 자금 70퍼센트가 홍콩을 거쳐 들어간다. 반대로 중국의 해외투자 60퍼센트도 홍콩을 거쳐 중국 밖으로 간다. 많은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래서 직선제 도입 같은 요구들은

중국 대중 다수가 자기 지역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일 테다.

홍콩 운동이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자, 정부가 긴급법을 동원해 운동을 탄압하는 현실도 시사적이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 당국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려고 1922년에 만든 법이었다. ‘사회주의’ 중국이 영국 식민 당국이 넘겨 준 경찰력과 제도를 이용해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꼴이다.

이런 점들은 중국 사회의 진정한 성격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서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임을 보여 준다. 한국의 진보·좌파가 홍콩 노동자와 청년들의 운동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홍콩민주인권법안은 순전한 위선이다

10월 15일에도 홍콩 대중이 대규모로 모인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13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집회는 미국 의회에 홍콩민주인권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시위였다. 2014년 우산운동의 스타인 조슈아 왕은 연단에 올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회주의자 램치렁은 민간인권전선이 아니라 ‘홍콩 본토주의자’들이 이날 시위를 주도했다고 본지에 알려 줬다.(홍콩 본토주의는 홍콩을 중국과 구분하며 중국의 통제에 대한 반대에서 더 나아가 홍콩의 분리 독립까지 주장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15일 집회 조직자들은 애초 2000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 그러나 긴급법 발동, 15세 소녀 의문사 사건 등에 관한 대중의 공분이 일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따라서 이날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 주도자들의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모두 동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

서 홍콩 운동을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뿐이다. 미국은 홍콩 운동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홍콩 본토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홍콩 노동자를 중국 노동자들과 정서적으로 단절케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니다. 홍콩 운동에는 중국 노동계급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부터 미국 지배자들은 적성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운동을 친미적 방향으로 이끌려고 개입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앞장서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적성국에서의 저항이 발전하면, 미국은 절대 그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다. 1980~19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에 대해서 그랬다. 1989년 중국 톈안먼 항쟁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탕크로 항쟁을 짓밟는 것을 미국은 내심 지지했다.

홍콩 운동도 계급적 운동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진지한 좌파들은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서구 정치인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홍콩 운동을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의를 옹호하는 길이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김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4일에 김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정록은 전문 통역자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에 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위험한 변화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적, 극우, 파시스트 조직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75년 만에 1930년대 독일 나치당과 사상과 실천 이 비슷한 정치 단체들이 부상하는 것 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당시 나치당 은 강제수용소를 차려 유대인 약 600만 명뿐 아니라 정치적 반대자·공산주의 자·사회민주주의자·로마인“집시”는 이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 정치 단체들은 소수자만이 아니 라 국내의 노동계급 전체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오늘날 부상하는 이들은 크게 [강경] 우파, 극우파, 파시스트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경 우파란 도널드 트럼프 같은 자 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인종차별적 우파며 극우파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줍니다. 트럼프는 집 권 초에 버지니아주(州) 샬러츠빌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파시스트들을 칭찬 했는데, 그 시위에서는 한 파시스트가 반(反)파시스트 시위대 한 명을 살해했 습니다.

극우파의 대표 사례는 ‘독일을위한대 안’(AfD)입니다. AfD는 현재 독일 제 1야당으로, 이 당은 전통적 우파 민족 주의자들과 공공연한 파시스트들이 공 존하는 정당입니다. 혼합형 조직인 셈 이죠.

AfD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자신감을 나치에게 주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나치의 부활은 가당치 않은 일로 여겨졌는데 말입니다.

이 사진(사진 2)은 2018년 8월 독일 동부 쾨니히스(市)에서 열린 극우 시위 를 찍은 것입니다. AfD가 부추긴 파시 스투들이 이민자·난민 반대 시위를 벌 였습니다. 거리에서 공공연히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독일에 있는 한 국제사회주의경향 (IST) 동지는 이렇게 시위 소식을 전 했습니다. “2018년 8월 26일 난폭한 나치 패거리가 ‘외국인’과 좌파들을 추 격해 공격하는 장면은 경악스러웠다. 다음 날 그들은 보란듯이 히틀러식 경례를 하며 이렇게 외쳤다. ‘독일은 독 일인을 위한 것이다! 외국인은 꺼져라!’”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 니다. 2018년 11월 11일 폴란드 독립 기념일에 수도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 조직들과 강경 우파 여당 법과정의당 (PiS) 당원들 20만 명이 행진했습니다. 모든 시위 참가자가 파시스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은 여 기에 무리 없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파시스트들을 거리로 나 오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시위 또한 전 라 우파와 파시스트들이 뒤섞인 사례 일니다.

전통적 우파, 혼합형 조직에 이어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진짜 파시스트 조직 일니다. 이 사진(사진 3)은 마린 르펜 이 이끄는 파시스트 단체인 국민연합 (옛 국민전선) 청년단원들을 찍은 것입 니다. 르펜은 2017년 프랑스 대선에 출 마해 2위를 했는데, 당시 유세에서 르 펜은 ‘세균성 이주를 박멸하자’고 주장 했습니다. 이주민의 사상과 문화를 질 병에 비유해, 비(非)유럽성 질병을 몰고 오는 난민들을 막자는 것입니다. 르펜 의 조카 마리옹 마르셀 르펜은 문화적 으로 기독교인 국가에서 무슬림의 지위 가 기독교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주 장했습니다.

파시즘의 역사적 구실

우리는 파시즘의 역사적 구실을 이해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파시즘에 관한 트로츠 키의 글을 모은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책갈피)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트로츠키는 파시즘이 어느 극우 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시 즘은 소수 장성의 음모나 쿠데타와도 다릅니다. 파시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입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시 즘의 역사적 구실은, 자본가계급이 민 주적 제도로 노동계급을 다스리고 지배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노동계급과 노동 계급의 조직을 분쇄하고 정치적 자유를

맑시즘2019에서 연설하는 찰리 김버

말살하는 것이다.”

대부분 시기에 지배계급은 우파 정당 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 같은 보통의 정당으로 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지배계급에게 해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체제의 위 기가 너무 심각하고 노동계급을 분쇄할 필요가 대단히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 다. 그런 시기에 지배계급은 파시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파시스트들은 1930년대에 나치가 했던 일을 재현하 려 합니다. 그러려면 파시스트들은 거 리의 군대를 조직해 적들을 위협하고 파업 노동자들과 좌파 집회를 공격해야 합니다.

이 사진(사진 4)은 히틀러가 집권하 기 5년 전인 1928년에 독일에서 찍은 것입니다. 당시 나치는 비교적 소규모 였지만 이미 갈색 제복을 입은 깡패들 을 돌격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들은 제복 색깔 때문에 ‘갈색셔츠단’으 로 불렸습니다. 갈색셔츠단은 거리를 휘저으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좌파를 위 협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는 이런 돌격대가 아 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갈색셔츠단 같은 조직은 아직 유럽에 없습니다. 가 장 근접한 사례는 이른바 ‘더 나은 형가 리를 위한 운동’, 즉 헝가리의 파시스트 정당 요빅당입니다. 이 사진(사진 1)은 2014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요빅당은 제복을 입은 돌격대 비슷한 것을 시도 했습니다.

이후 요빅당은 세가 약간 줄었는데, 현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이끄는 주류 우파 정당 동맹당이 성장했기 때문이었 습니다. 동맹당은 유대인·이주민·좌 파를 극도로 혐오하지만 파시스트 정당 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진은 요빅당 이 1920년대 나치당을 모방하려 했을 을 보여 줍니다.

배경

유럽에서 이런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부상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2007~2008년에 터진 경제 위기입니다. 세계를 휩쓴 이 위기 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직 장에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지배자들의 은근 공격으로 이어졌습니 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정치 상황이 크 게 변했습니다.

파시스트·극우파는 언제나 평범한 노동계급 대중과 체제에 뒷받침 사람들 을 대변한다는 거짓말로 스스로를 포장 합니다.

이 포스터는 1940년대 프랑스의 파 시스트 정부인 비시 정부가 제작했습니 다. 이 포스터는 ‘국가 혁명’을 주장한



① 2014년 헝가리 파시스트 정당 요빅의 준군사조직 헝가리수비대 ② 2018년 8월 독일에서 열린 이민자·난민 반대 시위 ③ 프랑스 파시스트 단체 국민연합의 청년단원들 ④ 1928년 히틀러의 거리 군 대 갈색셔츠단 ⑤ 1940년대 프랑스 파시스트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 ⑥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 당시 이탈리아의 유력 정치인들

이런 자들이 선거연합을 맺어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살비니는 베를루스코니를, 베를루스코니는 멜로니를 지지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 다. 이제 살비니와 멜로니는 이탈리아 내각 성원입니다.

셋째 요인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실패와 붕괴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입니다. 사회주의 정당들 은 주류 정치의 인종차별에 맞서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례를 들겠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제2차세계대전 종 전 후 프랑스 공산 정치의 양대 정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선에 서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고작 6퍼센 트를 득표해 2차 투표에는 진출도 못하 고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집권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독일 사회민당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주류 정치를 주름잡은 정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고작 6퍼센 트를 득표해 2차 투표에는 진출도 못하 고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집권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독일 사회민당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주류 정치를 주름잡은 정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고작 6퍼센 트를 득표해 2차 투표에는 진출도 못하 고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집권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독일 사회민당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주류 정치를 주름잡은 정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고작 6퍼센 트를 득표해 2차 투표에는 진출도 못하 고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집권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독일 사회민당도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주류 정치를 주름잡은 정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1차 투표에서 고작 6퍼센 트를 득표해 2차 투표에는 진출도 못하 고 5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집권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저항

파시스트 사진은 지극히궁하게 봤으 니, 이제 파시즘에 맞선 저항을 살펴보 겠습니다. 파시즘이 우리 측의 반발 없 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서서 해 서 파시즘에 대한 반감을 표합니다. 2017년 프랑스 대선 때 일부 프랑스인 들은 앞서 말씀 드린 국민연합 지도자 마린 르펜의 2017년 선거운동 포스터 에 스프레이로 “나치”라고 휘갈겼습니 다. 르펜에게 어느 우파 인사가 아닌 나치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1940년 대에 나치 점령 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프랑스인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자책가 매우 중요하하다.”

다음 사진(뒷면 사진)은 2019년 3월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공동전선 ‘인 종차별에 맞서자’가 주최한 집회입니 다. 수만 명이 참가했고 노동조합 활동 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행진했습 니다. 사진을 보면 ‘인종차별에 맞서자’ 의 현수막과 SWP 현수막이 함께 있죠. 규정입니다. 이런 식의 저항은 언제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리 시위가 훨씬 중요합니 다. 이 사진(사진 7)은 2018년 10월 독 일의 파시즘 반대 행진을 찍은 것입니 다. 사진으로는 규모가 잘 가늠이 되지 않지만 20퍼센트를 득표해 194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경제 위기 시 기에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우파 정당의 노동계급 공격 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 인종차별적 극우파가 세를 키울 정 치적 공간이 열렸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인종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노동조합, 난 민 지원 단체, 사회주의 단체 외에도 자 신 단체들이 이날 시위에 많이 참가했 다. 그러나 25만 명이 거리를 메운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하다.”

다음 사진(뒷면 사진)은 2019년 3월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공동전선 ‘인 종차별에 맞서자’가 주최한 집회입니 다. 수만 명이 참가했고 노동조합 활동 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행진했습 니다. 사진을 보면 ‘인종차별에 맞서자’ 의 현수막과 SWP 현수막이 함께 있죠. 규정입니다. 이런 식의 저항은 언제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리 시위가 훨씬 중요합니 다. 이 사진(사진 7)은 2018년 10월 독 일의 파시즘 반대 행진을 찍은 것입니 다. 사진으로는 규모가 잘 가늠이 되지 않지만 20퍼센트를 득표해 194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경제 위기 시 기에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우파 정당의 노동계급 공격 에 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 인종차별적 극우파가 세를 키울 정 치적 공간이 열렸습니다.



약 25만 명이 참가한 2018년 10월 독일의 파시즘 반대 행진

구실을 했습니다. 황금새벽당은 한때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했었죠.

우리는 유럽과 세계 각지의 국제사 회주의경향 동지들이 벌인 활동에 자 란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 는 자가 한 손에는 비수를, 한 손에는 독배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일단 비수부 터 빼앗고 독배는 그 다음에 처리해야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독일 노동계급 이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음을 알았습니 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위협을 물리칠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나치가 거느린 ‘거리의 군대’인 갈색셔츠단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당 시에는 좌파도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공산당은 적색전선이 라는 거리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 다. 노동자들의 회합을 지기고, 공산당 지도자들이 구타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돼 거리로 나왔습 니다. 1929년 적색전선 회원은 13만 명 에 달했고 대부분 노동자나 실업자였습 니다.

흑적금극기단이라는 조직도 있었습 니다. “흑적금”은 독일 국가에 들어간 색깔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독일사민 당의 조직이었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을 거리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까지 선거에서 공산당과 사 민당은 나치보다 훨씬 많이 득표했습니 다. 거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았죠. 그런데도 왜 그들은 단결하지 않는가? 이것이 트로츠키가 계속 던진 물음입니다. 같은 조직에 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안에 의견을 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 논쟁에서 사 민당에게 굴복하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거리에서 단결하 지 않는가?

독일사민당과 독일공산당 둘 다 문제 였습니다. 독일사민당이 독일공산당과 공동 행동을 거부한 것은 극좌파인 독 일공산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여겼 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사민당은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공산당원과 노동자들을 여러 차례 살해한 바 있습니다. 가장 악 명 높은 사례는 1919년 혁명 때 라 리 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를 살해 한 것이지만, 그 후에도 베를린에서 파 시즘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중요한 시위였습니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소속 단체이자 영 국 SWP와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 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의 활약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SEK는 연대체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 (KEERPA)를 주도해 다른 단체들과 함 께 황금새벽당을 저지하는 데에서 핵심 민주주의 조직과 파시스트 조직을 구분

하지 않은 것이죠.

이에 트로츠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나치와 사민당 모두 노동계급 에게 위협하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이 러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 는 자가 한 손에는 비수를, 한 손에는 독배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일단 비수부 터 빼앗고 독배는 그 다음에 처리해야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독일 노동계급 이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음을 알았습니 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위협을 물리칠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동전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전선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같 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SWP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맞서] 노 동당과 함께 공동전선을 합니다. 그러 나 그렇다고 저희가 노동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동당이 인 종차별에 타협할 때 저희는 노동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파시스 트와 극우에 맞설 때에는 노동당과 단 결합니다.

1931년 트로츠키는 엄중하게 경고합 니다. “공산당 노동자들이! 그대들은 너무 많다. 그대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없다. 그대들에게 발광열 여권이 모 자랄 것이다. 파시즘이 권력을 잡으면 파시즘은 무지막지한 탱크처럼 그대들 의 두개골과 척추를 으짚 것이다. 사민 당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 다!” 14개월 후 히틀러는 독일 수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1930년대 유럽과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위기의 규모가 1930년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1930년대의 위기는 대 량 실업을 낳았고 사람들의 삶을 완전 히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경고하건대 2008년에 터진 경제 위기는 아직도 사 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언 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다음 위기가 언 제 터지느냐입니다. 곧 위기가 터질 여 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1930년대에는 많은 이들이 제 1차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거 리 전투나 무장 조직 등에 익숙해져 있 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에 참전하고 독일이 전쟁에서 졌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 시스트들이 초기에 지지자를 확보했습 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제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제대한 사람들 이 파시즘에 맞선 ‘아르디타’ 기습부대 나 파시스트들의 ‘검은셔츠단’에 가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위기가 심화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것이고, 일부는 파시스트의 주장을 경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1930년대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지극히 중요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잘 조직해도,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위기에 빠지고 파시즘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문제의 근원이 이주노동자나 무슬림이 아니라 지배계급, 이윤 체제, 기업자들, 사회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투쟁은 계급 문제입니다. 파시즘은 노동계급과 다른 모든 민주적 조직에도 치명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시즘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반기를 들고 일어설 능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전선의 일부여야 하지만 동시에 혁명적 사회주의도 주장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집회 파시즘의 전진을 막는 열쇠는 파시즘에 맞서 단결된 운동을 건설하는 공동 전선이다. 혁명가들은 그런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리 발언

발언해 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합니다. 우선 1930년대 초 독일공산당의 성격, 그리고 그 때문에 공동전선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다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1928~1933년에 스탈린은 거대한 국가를 통치했지만 독일공산당은 국가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트로츠키는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 같은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과도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이라 함은 지도부는 압도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주로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정당을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정당과도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고 트로츠키는 촉구한 것이죠.

이런 정당들과 공동전선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1930년대에 독일사민당과 독일공산당이 저지른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조하건대 그런 공동전선은 가능하고 필요했으며,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편 한 동지가 이탈리아에 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탈리아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도 좌파인 이탈리아 사회당의 실패를 배경으로 5성 운동과 동맹당이 지난 총선에서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5성 운동은 뒤죽박죽입니다. 여러가지가 뒤섞인 주장을 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같은 노동자들을 위한 양보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주민에 관해서 동맹당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즉 이주민을 적대하고 사회문

제가 이주민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 동맹당은 이전 정부들보다도 더 나쁜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난민이 탄 배가 이탈리아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탈리아에 사는 로마인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동맹당은 이탈리아 우파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총리이자 동맹당 대표인] 살비니가 총리가 되서 더 우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조기 총선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도파 지지로 파시즘을 저지할 수 있는가

[파시즘에 맞서] 중도파를 지지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이 유익한 사례입니다. 현재 아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상당히 위협했습니다.

노란 조끼 운동 내에는 상이한 조류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밝아온 궤적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운동 내에는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 내에서 마크롱을 지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운동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운동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크롱에 반대한다. 그리고 르펜도 노란 조끼 운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적이다.”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동지가 예멘 난민을 방어하는 신문을 직장에서 판매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계급 내에서 까다로운 논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SWP가 발행하는 <소셜리스트 위크>의 가장 유명한 헤드라인도 “우리는 이주민을 환영한다”였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주민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신문을 팔아야 했지만, 인종차별 열풍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대중적인 선전이 필요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파시스트가 조직을 시도하는 모든 곳에 가서, 그들을 노동자에게서 떼어 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축구 경기를 언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 파시스트들은 ‘축구사나이연맹’이라는 단체에 뿌리를 내리려 해왔습니다. ‘축구사나이연맹’은 우파적인 축구 팬 모임입니다. 저희는 파시스트들에 맞서 축구 경기장에서도 리플릿을 배포했습니다. 글래스고 셀틱 같이 진보가 우세한 경기장만이 아니라 글래스고 레인저스처럼 우익이 우세한 곳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파시스트들을 논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셋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중행동입니다. 파시즘에 맞설 때 의회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한 동지의 지적은 옳습니다. 영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에는 파시스트의 집회와 행진을 그저 법으로 금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파시스트들을 제대로 막으려면 거리로 수많은 사람을 불러내 그들과 맞서게 해야 합니다. 한 편 그저 개인으로서 파시스트들을 물리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양측 싸움꾼들의 주먹다짐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은 파시스트에 맞설 정예부대를 넘어 대중행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동지가 “파시즘”이라는 표현이 오·남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우 옳은 지적입니다. 파시즘은 여느 우파,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 조직과는 다릅니다.

위험

파시즘은 저희 같은 혁명적 좌파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파시즘은 노동조합의 가장 보수적인 인사들도 파멸시킬 것이며, 민주노총은 물론 모든 노동조합, 심지어 국가와 연계가 있는 노동조합도 파괴할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민주적 조직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정의당이나 민주당 일부도 쓸어버릴 것입니다. 나치는 보이스카웃도 불법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의 요소가 있는 모든 것은 짓밟았습니다.

한국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한국 극우의 힘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위험에 대해 언제나 양가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파시즘이 곧 득세한다고 겁을 주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를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이한 태도를 취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극우와 파시스트의 승리를 필연으로 여겨선 안 되지만,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또한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인종차별·극우·파시즘이 성장할 위험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도 브라질처럼 노동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이 강력한 나라에서 보우소나루 같은 극우파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우소나루는 세계에서 중요하기로 손꼽히는 한 나라에서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뿌리내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소개한 책(<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책입니다. 트로츠키가 말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파시스트가 패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광범한 운동 내에서 우리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국 파시스트와 극우는 다른 유럽 국가의 파시스트나 극우보다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향과 조직의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저희들은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SWP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과 파시즘을 확실하게 물리치고 싶으시다면 노동자연대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할 것을 권합니다.

녹취 유나연 정리 김준호·이원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위기의 영국 정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10월 17일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지배자들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아래 논평이 쓰인 다음 날인 10월 22일, 영국 하원은 합의안 통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표결을 한 동시에 정부의 10월 말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도 제동을 걸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금의 복잡한 국면을 설명하면서 좌파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으로 다가갈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흥내내기 좋아하는 처칠식 말투로 표현하자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좌절된] 10월 19일에 존슨은 '전투에서는 졌으나 아직 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도, 그의 총선 승리 전략도 아직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첫째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더라도 남/북 아일랜드를 엄격한 국경으로 분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유럽연합이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아일랜드는 곧 유럽연합을 떠날 영국에 속하고, 남부의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전 총리] 테리사 메이는 장기적인 무역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영국 전역을 유럽연합 관세동맹 내에 두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했다.

유럽연합 강경 탈퇴파들은 메이가 영국을 지나치게 유럽연합과 가깝게 두려 한다며 이런 방식에 반대했다. 존슨은 유럽연합의 원안(북아일랜드만을 유럽연합 관세동맹 내에 실질적으로 남겨 두는 것)에 굴복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처했다. 이런 내용을 완회시키려 존슨은 북아일랜드가 영국 “관세 영토”에 속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를 남부의 아일랜드, 여타 유럽연합과 연결시켜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나머

지 지역과 다른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 아일랜드 통일에 결사반대하는 영연방병합당(DUP, 북아일랜드 우파 정당이자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메이가 이 방식을 거부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그와 달리 존슨은 영연방병합당을 배신했다. 북아일랜드에 더 많은 예산을 약속하는 당권을 내밀기는 했지만 말이다. 보수당 내 강경 탈퇴파들은 이 배신에 불평 한마디 내지 않았다. 그들 지도부의 일원인 제이컵 리스모그는 몇 달 전만 해도 영연방병합당을 “영국의 통합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추켜세웠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합의안의 둘째 쟁점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관심사는 (브렉시트를 되돌리겠다는 망상을 제쳐 둔다면) 영국이 자신들의 무역 규정을 계속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지도부는 영국이 완화된 노동·환경 규제를 무기 삼아 다른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템스강의 싱가포르”)에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메이의 합의안대로라면 영국이 사실상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었다.

싱가포르

보수당 우파는 메이의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템스강의 싱가포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슨은 총리가 된 후, 유럽연합과 규제 문제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겠다는 메이의 약속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해 왔다. 협상 과정에서 존슨은 일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존슨이 서명한 합의안은 메이의 합의안보다 법적 구속력이 덜하다. 존슨은 노동·환경 규제를 유지할 테니 자신의 합의안에 찬성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몇몇 노동당 의원(11명)은 그 약속을 믿는다. 존슨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영연방병합당의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19일에 존슨이 표결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많은 의원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몇 주 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존슨은 10월 31일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요청을 유럽연합에 마지못해 보냈다. ‘노 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재확인

되면(아마 그리될 듯하다) 하원의 팽팽한 균형이합의안 통과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유럽연합 지도부는 아마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19일 [합의안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거나 유럽연합이 브렉시트를 막아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 꿈꾸는 유럽연합 잔류파들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가 말한 것처럼, “유럽대륙의 지배자들은 지금 보리스 존슨을 영국 정치의 거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그들은 정치적 동맹으로서 존슨을 필요로 한다.” 존슨이 실제로 “영국 정치의 거물”이 될 것인지는 총선(더는 미뤄선 안 된다)에 달려 있다. 존슨의 목표는 명확하다. 규제 없는 영국이라는 강경 대처주의자들의 꿈을 ‘영국의 독립’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의회에 맞선 국민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려는 것이다. 만약 노동당이 이번 합의안과 유럽연합 잔류를 놓고 두 번째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도살장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그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노동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에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정치적 순간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677호 / 번역 최병현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소동

★ 경북대병원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쟁취

★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 문제인 정부의 또 다른 거짓말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차별해소 약속 외면한 교육청들

★ “국가책임 보육” 약속 무색한 보육체계 개편안

★ 에라도르: 개혁 정부 배신에 맞서 노동자·대중이 승리하다

★ 다시 불 붙은 카탈루냐 독립 운동

★ 레바논, 정권 퇴진 운동 분출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또 사망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차별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밀양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

고질적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

이재환

10월 22일 밀양역 구내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철도 궤도 수평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비극적이게도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량진역, 온수역, 금천구청역에서 벌어진 사고도 모두 열차 운행 중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그래서 철도노조는 열차 운행 중 작업(상레 작업) 중단을 요구해 왔다. 밀양역 구간처럼 새벽에도 열차가 운행돼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7명의 작업 인원 배치와 작업 시간 확보(열차 차단)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빈번한 사고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년 한 달 사이에 철도 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누구도 안전이라는 가치 앞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 피해 노동자들의 안전모가 떨어져 있다

서만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금지했을 뿐이다.

경부선 밀양역 구간은 하루에 열차가 130회 다니고 무려 시속 130킬로미터로 달린다. 철도공사 사측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 텐데도 현장에 작업 실적을 닦달했다. 안전은 완전히 뒷전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인력 부족이 낳은 참사였다.

한 철도 노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7명이 작업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5명만 투입했다. 더군다나 선임장은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감독자인데 열차를 감시하는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다”.

철도노조의 설명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사고 장소는 곡선 구간으로, 옆 선로에서도 열차가 운행되고, 작업 소음으로 무전

기의 소리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경우 최소 2~3인의 열차 감시자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열차 감시자는 1명뿐이었다.”

공공기관 중 재해·사망률 1위

이번에 사망한 조합원이 일하던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 팀 밀양시설반의 정원은 7명이다. 그러나 현원은 6명이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2018년 상반기 철도 노사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로 “6인 이상 필요한 본선 작업은 합동작업 등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세부사항은 소속기관별로 협의한다”는 합의도 했지만 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철도의 산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공사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22개 주요 공공기관 중 철도공사는 재해율과 사망률이 1위다. 철도 노동자들이 공기업 중 임금수준 최하위, 만성

적 인력 부족, 산재 발생 1위인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최근 (철도)공사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5년에 걸쳐 8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차량·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사람은 빠져 있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정원감축 구조조정으로 인해 철도현장에 무수히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4600명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최근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3일간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철도공사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명분으로 관제권 분리를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관제권 분리는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안전을 더 위협하는 일이고, 실제로는 SRT(수서고속철도) 분할을 고착화하고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을 강화하려면 철도를 통합해 통합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인력이 대폭 충원돼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계로 말이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은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했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항의한 것이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우파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시위를 ‘친북 학생들이 벌인 반미 난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도 직접 나서서 유감 입장을 내놓았다. 모두 시위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했다. 경찰은 시위 학생 19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와 검찰이 갈등하느니 마느니 하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이 있다 해도 미국 제국주의와 그것을 한국 정부

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고 친미 우파의 기를 살려 주는 데서는 그들 모두 찰떡궁합인 것이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들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의 제스처를 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부각하려고 말이다.

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군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주한미군은 백해무익하다. 주한미군은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위해 한국에 주둔한다. 그래서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을 부르는 요인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근본에서 뿌리치지 않고 있다. 이미 3월에 주한미군 지원금을 8.2퍼센트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 9월에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나 한국의 대대적인 미국 무기 수입 계획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고 한국을 ‘칭찬’했지만, 주한미군 지원금 추가 인상은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트럼프 정부를 대표해 문제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지원금을 기존보다 5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종료는 한국 정부의 “실수”라며 협정 연장도 종용했다. 이 발언은 한·일 갈등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국무총리 이낙연을 일왕 즉위식에 참석시켜 아베를 만나게 하는 등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진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견인”할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와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운동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 올봄에 정부는 1년 반 전인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를 이유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번 시위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택해 비폭력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르지도,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은 경찰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자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정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속 학생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10월 20일 시위 학생 구속 반대 기자회견(위)

10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항의하는 학생들(아래) 학생들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정치적 항의의 제스처를 했을 뿐이다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정진희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

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교사들이 이번 사안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 억압기구인 수사기관에 성평등 수업에 사용된 영상의 위해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성교육과 진보 교사를 공격하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안은 교사들은 물론, 성평등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국가기구의 성평등 수업 탄압

에 맞서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활동이 지속·확대돼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선적이다. 경찰에 넘긴 장본인이 광주시교육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교사들에게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방어 운동을 확대하자

그간 광주시교육청의 관료적인 ‘스쿨미투’ 대응에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쌓여 왔다. 특히, 성평등 수업마저 성희롱으로 낙인 찍는 야만적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하며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했다. 당사자와 광주 교육단체·노동단체 활동가들이 연대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항의시위를 하며 이 사안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노동자 연대>는 8월 10일 성명을 처음 발표한 뒤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배이상헌 교사 방어 운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모임과 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 활동을 펼친 것은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대의원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이런 정서는 전교조 지역별 대의원대회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지 않는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 지도부의 회피는 계속됐다. 9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면피

성 토론회를 열었고, 며칠 뒤 당면 핵심 문제는 회피한 채 향후 매뉴얼 개선만에 기하는 성명서를 냈다. 진보교육감과 충돌을 꺼리는 노조 지도자들의 개량주의적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이것은 교육청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조합원들을 보호해 주길 바라는 기층 조합원들의 염원과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배이상헌 방어 운동이 확대되자, 광주시교육청은 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10월 14일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심의위(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배이상헌 교사의 사건 처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관료적으로 발뺌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것이다. 배이상헌 교사 방어 운동이 더 커져야 할 이유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는 활동이 더 확대돼야 한다. 10월 19일 시민모임 주최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이

사안의 본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전교조 지도부 주최의 면피성 토론회와 달리, 당사자인 배이상헌 교사도 패널로 참가해 토론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배이상헌 교사가 재직하던 H중학교 학생 다섯 명이 시민모임이 받고 있는 서명에 처음으로 동참했다. 학생들은 “도덕쌤 돌아와주세요” “나의 위대한신 선생님을 성비위 교사로 몰락시킨 교육청은 반성해라” 등의 문구를 남겼다.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은 교사와 활동가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배이상헌 교사 탄압에 항의해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연다. 광주 교사 3500여 명은 배이상헌 방어 서명에 동참했다. 시민모임은 광주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열며 방어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중순에 서울에서 수도권 토론회를 여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배이상헌교사를 성비위 교사

10월 19일 시민모임 주최 토론회 전국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하며 결의를 다졌다

교차사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다

10월 19일 전교조 내 주요 의견그룹 중 하나인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차사)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교육 수업을 성비위로 처리한 광주교육청의 겹쳐한 자기 반성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치심과 불편한 감정을 성적 학대 행위로 확대해석”하며 경찰에 넘긴 광주교육청의 행위를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폭력”으로 옳게 규정

했다. 교차사는 다음의 정당한 요구도 제기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광주교육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잘못된 결정 과정에 참여한 교육청 간부와 담당자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 “직위해제 취소 등 원상회복”. 교차사가 토론 끝에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이런 정당한 요구를 외면 말고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한다.

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김우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기아차 사측이 10월 23일 화성공장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과 엔진부 대의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각각 해고(엔진부 대의원), 출근정지 2개월(김승현 조합원), 출근정지 1개월(엔진부 대의원) 등이다. 이 활동가들이 몇 해 전 각각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외주화 반대, 사측의 일방적 협의 위반 철회 등 현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이다.(관련 기사: 본지 299-1호 ‘기아차 사측은 부당 징계 시도 중단하라’) 그 동안 징계 반대 운동을 건설해 온 노동자들은 투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자들의 반발로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기아차 조합원 50여 명이 징계위원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승현 조합원이 속한 조립3부 의장 3반을 중심으로 방어 운동도 확대돼 왔다. 열흘 만에 노동자 2453명이 징계 중단 서명에 동참했다. 활동가들은 10월 22일 화성 공장의 주요 식당 5곳에 수백장의 서명지 복사본을 부착해 사측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김승현 조합원 소속 반원들은 점심 시간에 식당 앞에서 사측 규탄 홍보전도 했다. 김승현 조합원은 “굶핍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지·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겁다. “주간연속2교대제 제대로 하라고 투쟁했던 게 왜 탄압 받을 일이냐!”, “4년 전 투쟁을 이유로 이제 와서 징계한다니 회사가 미쳤다”, “이런 징계를 방지하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우수수 탄압이 올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명용지를 달라며 “우리 반 서명은 내가 받아 주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인상적이게도, 징계 반대 서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도 동참했다. 한 노동자는 김승현 조합원이 비정규직 투쟁에도 열심히 연대해 줬다면 “노조가 분리됐지만, 우리는 서로 연대를 지속하자”고 말했다. 현장 탄압 강화하는 사측 세계경제 위기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현대·기아차 사측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쥐어짜려고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저항을 제약하려고 최근 현장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작업 불량 3회 이상 발생시 노동자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현장 감시·사찰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냈다는 이유로 울산공장 현장제조직 소집권자인 활동가들 고소고발했다. 김승현 조합원 등에 대한 징계는 이런 현장 탄압의 일환이다. 부당 징계를

막아내는 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징계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가 사실조사위를 구성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기아차 단체협약 37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아차지부 강상호 집행부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실무회의록을 조합원들 몰래 사측과 작성했지만, 올해 5월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는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실무회의록은 효력을 갖기 어렵고, 실무회의록 작성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사측이 결국 징계를 강행한 만큼, 징계 반대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징계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최근 조립3부 대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



공정안

공장 안 중식 선전전

로 결정했다. 조립부서 전체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립 공투위’에도 항의 행동 제안이 들어갔다. 최근 뽑힌 기아차지부의 신임 집행부도 즉각 방어 입장을 내고 항의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층에서 항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자.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를 보시오.



민주당-한국당은 노동자 공격에서는 한통속이다 올해 3월 노동개악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김종현 기자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글은 10월 22일자 노동자연대 성명(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대표집필)이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간 상한제 무용지물로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기, ILO협약 비준 핑계로 되레 단결과 쟁의 제약하기가 핵심 내용이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노동개악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몇 주 전부터 성마르게 노동개악을 재촉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10월 4일(경제단체장 오찬간담회), 8일(국무회의), 17일(경제장관회의) 세 차례나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을 촉구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

면 주 52시간제를 ‘보완할’(즉, 무용지물로 만들) 행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월 17일(한국 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갈 정책”이라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운동 잡아 두기 노력

집권 이래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인들(특히 재벌총수들)의 지지를 얻으려 애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현대차(남양연구소)를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런 행보다. 정부는 2020년 예산도 기업 투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기업주 친화성을 인증하려 할수록 한국 자본가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인 한국당의 기를 더욱 살려 줄 것이다. 상대방의 주특기 종목을

선택해 대결을 하는 셈이거니와, 버터맛 나는 마가린보다는 버터를 더 좋아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주들의 신임을 확실히 얻으려면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기구)에 그런 구실을 기대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발로 그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에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여성·비정규직·청년)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교체하고서야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이 치졸한 과정은 경사노위가 노동개악을 위한 ‘담정녀’ 기구이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줬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극화와 진영논리가 강화되자 노동운동 내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패스트트랙(검찰개혁과 선거법)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노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

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노동운동의 대응에 달려 있다.

요행을 바라며 투쟁을 미뤄서는 안 된다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여드레 뒤로 예고된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실질적 총파업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 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것을 누가 더 잘하는지 다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하루 파업이나 국회 앞 집회 정도로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요행을 바라면서 투쟁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개악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 상임위(환경노동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노동개악안 국회 상임위 의결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개악에 대한 현장(일반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과 임금, 단결·파업 권리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 핑계를 대기보다)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은 결과, 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전열을 이완시킨 점을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와 단절하고 노동개악에 단호하게 맞서는 총파업을 소명한다면, 현장 조합원들은 그에 호응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그 자신감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집권 민주당은 이전 우파 정권들이 관철시키지 못한 노동개악을 완수하는 구실을 했다. 김영삼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실행한 게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이제 박근혜가 실패한 노동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도록 놔둘 것인가?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총파업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